박지원 "국민·당원, 과거 안철수 원해"

페이스북 통해 비판 "현재 安 버려…모두가 불행한 길 가"

"통합 나서지 않았다면 당 지키며 국민위한 정치 했을 것"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국민과 당원은 과거의 안철수를 원하지 현재의 안철수는 이미 버린다(버렸다)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우리 모두가 불행한 길로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대표가 통합을 들고 나서지 않았다면 총선 민의대로 국민의당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안 대표는) 미국에서는 선물거래까지 하는 비트 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 4차산업혁명 지도자로 부각되었을 것이다"면서 "또 영화 1987을 관람하고 느낀대로 1987체제를 종식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수시키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이끌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 등 노사간 현안에 대해서 (안 대표가) 가장 적절한 경험을 가졌기에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4차산업혁명과 미래를 제시했는지 국민들은 기억한다"면서 "U턴은 정녕 불가능하고 자파일색 전준위, 500명 대표당원 임명한다 해도 2월4일 전대를 치룰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주춘정 기자

통합반대파 천정배 "기득권 야합 세력 기도 절대 용납 안 돼"

"미완 끝난 1987년 혁명 완수 시대적 사명 있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박종철 열사 추모 31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87년 국민항쟁의 쓰디쓴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혁명의 큰 물줄기를 멎게 하려는 기득권 야합 세력의 기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그의 죽음과 독재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한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 혁명을 일으켰다"며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6월 혁명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기쁨도 잠시 그해 12월 정권교체의 실패, 뒤이어 1990년 3당 야합으로 혁명은 미완의 승리에 그쳐 버렸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미완으로 끝난 87년의 혁명을 완수해야 할 시대사적 사명이 있다"며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소수 특권세력이 부와 권력을 독식해 온 탐욕의 시대를 떨쳐내고 상생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文정권에 "평창올림픽, 남북관계 정치쇼로 이용"

"우리는 민심만 보고 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우리가 유치한 올림픽을 세계 스포츠 행사가 아닌 남북관계 정치쇼에 이용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를 이용해 정권을 잡고 문슬람 댓글 여론 조작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방송을 탈취하고 신문을 압박해 포털을 장악하고 관제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해 지지율을 조작하는 참으로 대단한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기업 압박으로 민생은 파탄 났다"며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논란과 관련해서도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청년은 희망을 잃고 비트코인 광풍에 매달릴수 밖에 없는데도 이를 없앤다고 발표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홍 대표는 "71년 유신 헌법 전야와 같은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헌법 개정을 해 나라의 틀을 바꾸려고 한다"며 "듣기 곤란한 질문은 회피하고 정치보복을 적폐청산이라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민심만 보고 간다. 새해에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당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경제장관들과 호프미팅 김동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 호프집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호프미팅에 앞서 건배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靑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오는 2~3월 평검사 직위 10여개 외부 개방

청와대는 14일 앞으로 만들어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고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게 한다는 개혁안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별수사에만 한정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 관련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공수처 이관, 직접수사 축소 등을 시도한다. 특수수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된다.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들의 임용도 대폭 늘어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됐다.

다음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을, 오는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를 외부 개방해 비 검사 출신을 보임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외부 공모할 직위에 비 검사가 보임되면 법무부 탈검찰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표적 수사라고 짜증 낸 MB? 자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가) 전달되지 않았겠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짜증을 내며 '(상납받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 수사'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의 요구로 다스(DAS)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됐으니 짜증이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꼬았다.

그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서 수사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증거가 드러남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